

## 오늘 수능

광주·전남 4만1천명  
출근시간 1시간 늦춰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0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07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지난해(71만227명)보다 2.6% 줄어든 69만3634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광주·전남 수험생 4만1796명은 87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았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 3교시 외국어, 4교시 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시행된다.

수능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13도, 낮 최고 기온은 15~18도를 보이는 등 평년 수준으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낮부터 비가 예보된 지역은 완도·진도·신안·강진·해남·장흥이다.

이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30일 수험생에게 개인별 성적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9일 광주시 광산구 진중고등학교에서 학생 800여명이 교정을 나서는 고3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5·18 교과서 삭제 '역사 역주행'

### 5·16, 신군부 등 독재·민주화 내용

### 집필기준에서 빠져 광주 시민 분노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2007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시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 객관적 서술 ▲유신체제 무너진 뒤, 5·18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 장악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5·16 군사정변 기술 ▲4·19, 5·18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등을 서술한다고 돼 있다.

결국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와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과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및 현법개정을 통한 1인 장기 집권독재, 전두환 등 신군부 정권 장악 등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독재'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화시켰다. 또한 집필기준에 민주화와 관련해 두 차례나 거론됐던 5·18은 아예 없어 버렸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지워졌다.

오는 2013년부터 중학교 '지침' 구실을 하게 될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5·16 군사정변'·'5·18 민주화운동'·'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다. /관련기사 3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고교 국어 및 경제, 초·중·고교 도덕 등 4개 과목의 집필기준을 8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독재 부분을 '4·19혁명'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발전과정을 정치번동과 민주화운동

이에 대해 5·18 관련단체와 기념재단은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랄 수 있는 5·18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아예 사장시키기 위해 역사 교과서까지 누르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도 "지난 9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며 "5·18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올바르게 서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제7회 광주일보문학상 이원화씨



다. 지난 3월 첫 소설집 '길을 묻다'(문학脾胃)를 출간했다.

시상은 내년 1월 '2012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함께 이뤄지며, 이씨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페블리 9홀

#### VIP 정회원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한정), 1인 2회(1회 18홀 기준)
  -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부유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권
- \* 계약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 휴먼 정회원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징회원 2인 :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병원 없음
  -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권(70회 사용, 1일 1회 사용)
- \* 계약서 : 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VIP회원 및 해피·휴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개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진금원납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



## "한미 FTA 농업대책 먼저"

박준영지사 "전남농가 소득 1조4천억 감소"

여·아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FTA 시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제 1 애당답게 하라"고 비판하다.

<관련기사 3면>

박준영 전남지사는 9일 "국회의 비준안 처리가 농업·농촌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데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돼 발효되면 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1조4085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보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 농업소득 감소액은 전국(10조470억원)의 14%에 달한다.

특히 축산분야는 전남 전체 감소액의 74.5%인 1조500억원에 달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남의 연간 농업생산 감소액을 분야별로 보면 소고기를 비롯,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분야가 700억원, 과수 143억원, 채소·특용작물 73억원, 곡물 23억원 등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FTA 문제점 보완 내년 1월 처리해야"

###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9일 "농업, 수산업 등 한미 FTA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본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공무원 대상 특별 강연을 위해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이 엄연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데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장을 막는 강력한 조례가 있는데 한미 FTA가 시행되면 관련 소송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폐소했을 때 자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